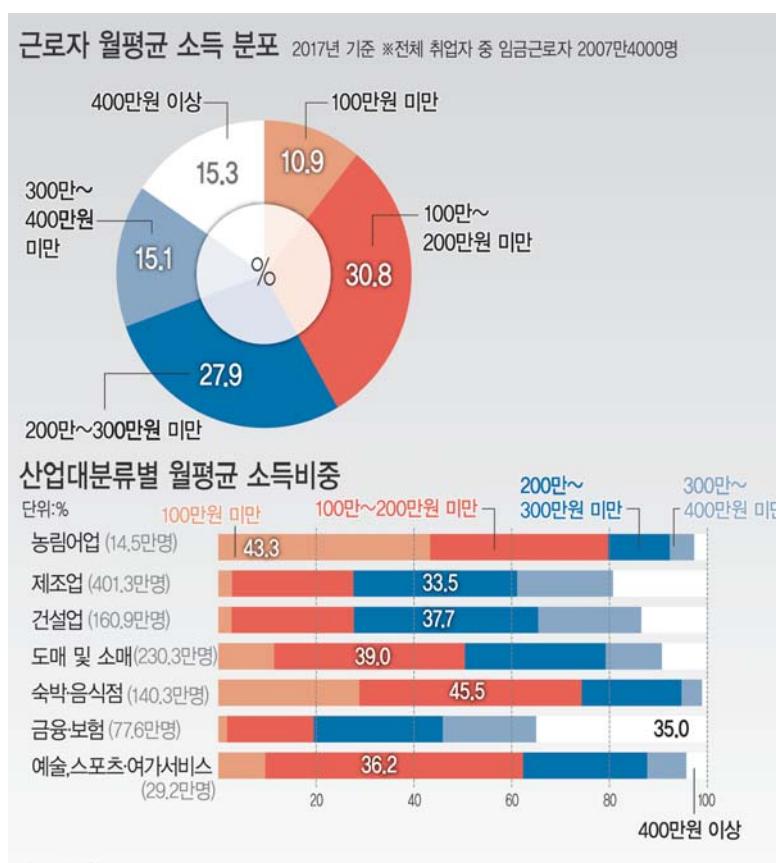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월 200만원도 못 받았다

통계청,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발표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농림어업' 43.3% 1위
400만원 이상, '금융 및 보험업' 35.0% 가장 많아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월평균 20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1명은 월평균 100만원도 받지 못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2007만 4000명 중 월평균 200만원 이하를 받는 비중은 41.7%를 차지했다.

이 중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 미만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5%포인트, 3.0%포인트 하락했다.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 10.9%, ▲100만~200만원 미만 30.8%, ▲200만~300만원 미만 27.9%, ▲300만~400만원 미만 15.1%, ▲400만원 이상이 15.3%로 집계됐다.

산업대분류별로 보면 100만~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43.0%), '농림어업수련종사자'(40.4%), '판매종사자'(39.5%) 등의 순이다.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이 43.3%로 가장 높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8.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1.3%가 월평균 1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이어 100만~200만원 미만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에서 절반을 넘긴 52.7%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45.5%가 100만~200만원 미만을 받았다. 그 뒤로 '부동산업'(4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0.3%) 등의 순이다.

특히 200만~300만원 미만은 '건설업'(37.7%), '운수 및 창고업'(34.7%), '제조업'(33.5%), '도매 및 소매업'(28.8%), '부동산업'(28.3%), '정보통신업'(28.2%) 등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00만원 이상은 '금융 및 보험업'(35.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4.3%), '정보통신업'(29.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7.1%) 등에서 많았다.

직업대분류별로 보면, 100만~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43.0%), '농림어업수련종사자'(40.4%), '판매종사자'(39.5%) 등의 순이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1.4%)가 가장 높았고 '기능원 및 관련기술종사자'(40.7%), '사무종사자'(30.2%)가 그 뒤를 이었다.

관리자 가운데 77.0%는 400만원 이상을 받았다. 관리자 중 1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뉴시스

롯데리아, 업계 최초로 '치즈스틱+베이컨' 출시

세번째 확장 제품

롯데리아는 모짜렐라 치즈에 베이컨 칩을 넣은 신제품 '베이컨 통 치즈스틱'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스테디셀러 디저트 제품으로 자리잡은 치즈스틱을 1998년

업계 최초로 출시하고 2016년 길이를 두 배로 늘린 롱 치즈스틱을 출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확장한 제품이다.

롯데리아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베이컨 통 치즈스틱과 롱 치즈스틱을 3000원에 판매한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1인당 동전 438개 보유…한은 “숨은 동전, 지폐로 교환을”

매년 6억개 안팎 동전 제조…재유통하면 비용 절감

한은의 동전교환운동에 참여하려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을 유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농·축협 영업점에 가져가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하면 된다. 일부 영업점에는 동전입금이나 무인기가 비치돼 있어 이를 이용하면 된다.

지폐로 교환한 뒤 남은 동전은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할 수도 있다. 모금액은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액 전달된다. 한은은 동전교환운동이 끝나면 금융기관 유공자에게 한은 총재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은은 “동전교환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평상시에도 금융기관에서 동전을 교환하거나 입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 출시

정부가 이르면 5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를 출시하고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책의를 갖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중도금 보증 확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원장, 박병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찬대·김정우·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당정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금일 논의된 방안은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24일),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29일) 등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를 출시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차녀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차녀 9000만원, 2차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당초 정부 안은 2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원칙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기준 8500만원으로 상향…이르면 5월부터 실행

전세자금·중도금 보증확대 등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정은 전세보증 정책모기지 등 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현정된 대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키로 한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리상승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를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보다 많은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기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재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확대해 금리상승, 고령화 등 위험 요인에 따른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를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정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향후에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